장준하씨 사망의혹 의문사위도 못풀어

시한만료따라 '규명 불능' 결정
사고뒤 중정 요원 급파등 확인

지난 16일 조사활동 시한이 끝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 장준하씨의 죽음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1988년의 재수사(의정부지청) 때는 "타살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93년 민주당의 사인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고인의 주검에 대한 법의학적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이번 의문사위의 '규명 불능' 결정으로 고인의 죽음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으나, 지난 1년8개월에 걸친 위원회의 조사는 의문점의 윤곽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고인의 죽음 직전과 직후에 바싹 다가와 있었음이 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중정은 75년 3월 31일 '위태분자 관찰계획'을 수립하고, 고인의 일일동향을 파악하고 감청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출된 당시 중정의 동향파악 자료는 사고 당일인 8월 17일분이 빠져 있다. 또 위원회는 사고 직후 중정요원 3명이 현장으로 급파되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인적사항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위원회의 조사시한 만료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당시 중정에서 야당 동향파악을 담당했던 계장급 직원은 고인의 사망현장의 유일한 동행자인 김아무개씨가 자신의 사설 정보원이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으나, 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의 후임 계장들을 조사하면 이 사설 정보원의 윤곽은 좀더 드러날 것이지만, 이 또한 조사시한 만료로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직전과 사고 직후의 중정의 역할이 연결되지 않아 중정을 사인과 관련되어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위원회가 밝혀낸 의문점은 많다. 동행자 김씨가 사고 직후 포천경찰서, 의정부지청 등을 옮겨다니며 조사를 받는 동안, 간단한 인적사항만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중요한 의문점이다.

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동파출소 순경 이아무개씨가 포천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도경의 출동지시를 받은 점, 그리고 사고 발생시각이 오후 2시30분인데 2시부터 3시 사이에 고인의 가족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현장으로 가보라"는 발신자 불명의 전화가 걸려온 점도 의문점이다.

장준하씨는 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등반하다가 12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실족사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발표했으나 추락사체에 두부함몰상 이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며, 안경과 보온병 등에 긁힌 자국도 없었고, 당시 정보기관들이 장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제기되어 있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국정원 실지조사 관련 보도

의문사위 '국정원 방문 첫 실지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피진정기관의 관련자료 비협조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방문, 처음으로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진정 기관들이 위원회의 한시성을 악용,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며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10명이 7일 오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을 방문, 제출을 요구한 관련자료의 존재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현재 장준하 의문사 등 의문사 12건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지만 국정원에서는 `문서실 확인불가', `별도자료 없음' 등의 회신을 보내오거나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지난 4월 국정원장을 방문,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결국 무산됐다'며 '장준하 의문사와 같이 당시 중정 직원으로부터 기존 자료외에 방대한 자료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온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자료 존재 여부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33명에 대한 간담회 결과 계엄당시 이미 강제징집 시스템이 마련됐고 강제징집자 일부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으며 일반 아파트에 마련된 과천.진양 분실에서 학생운동권 조직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등 녹화사업이 `학생운동 탄압공작'의 성격을 가졌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투신자살 박창수씨 타살가능성"
日법의학자, 의문사委에 감정서

1991년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朴昌洙·당시 31세)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박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의학 감정이 나왔다.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滋太郞) 교수는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서에서 "골절과 심폐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인 것으로 보이며 추락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가미야마 교수가 보낸 감정서는 위해 여러 법의학자에게 요청한 감정서 중 하나"라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의학자가 보내는 감정서를 종합해 박씨의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의문사규명위 "국정원 방문조사"

'장준하 의문사' 등 자료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일 장준하, 이철규 사건 등 조사 중인 의문사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 12건의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위원회 관계자 10명이 7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방문,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장준하 교수 의문사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서 기존 자료 외에 방대한 자료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와 관련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지조사는 해당 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해당 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진상규명위는 5월 기무사에 실지조사를 하러 갔으나 기무사측의 거부로 조사관들이 기무사 면회실까지만 갔다 되돌아온 전례가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33명에 대한 간담회 결과 80년 초 계엄 당시 이미 강제징집 시스템이 마련됐고 강제징집자 일부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아파트에 설치한 과천, 진양분실에서 학생운동권 조직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등 녹화사업이 학생운동 탄압공작의 성격을 띤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의문사委 국정원등 방문조사

"자료요청 기피 심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위원회 관계자 1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중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기무사 등의 문서보관시설에 대해 실지조사(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무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요청한 자료까지 '문서실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했다"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문사 특별법을 근거로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오는 7일 오전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을 시작으로 14일 국방부, 21일 기무사를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의문사위는 지난 5월 기무사에 조사관을 보냈다가 거부당한 적은 있으나, 위원들이 직접 실지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 의문사위는 국가정보원 자료보존실 실지조사에서는 고(故) 장준하(張俊河)씨 관련 존안자료 등 12건의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기록의 누락 혹은 변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이크로필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제출할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며, 국방부와 관련된 현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측은 "군정보기관의 문서보관소를 공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康康洙기자 ksyoum@chosun.com

경향신문 2002. 8. 2

의문사委 국정원 방문조사

'자료제출 비협조적' 관련서류 존재여부 확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오는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요청한 자료중 거부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기무사 등 피진정 기관들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것을 악용,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면서 "의문사규명 특별법 22조에 따라 상임위원 등 10명이 처음으로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방문해 제출을 요구한 관련자료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어 "한위원장이 지난 4월에 국정원장을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국정원장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결국 무산됐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국정원에 장준하사건 등 12건의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문서실 확인불가' '별도자료 없음' 등의 회신이나 자료 일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간담회'에서 징집이 변칙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중 일부는 대북 심리전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國民日報 2002. 2002. 8. 2

의문사委 "국정원등 현장조사"

"자료제출 비협조적"… 국방부·기무사 "확인자료 모두 제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오는 7일 피진정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위원들이 국가정보원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오는 14, 21일 국방부와 국군기무사의 문서보관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이나 국방부와 기무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는 "국정원 등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준곤 상임위원 등 관계자 1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방문,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현재 장준하 사건 등 의문사 12건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 등은 일부 자료가 폐기됐고,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2002. 8. 8 東亞日報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현장조사 무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7일 장준하(張俊河), 이철규(李哲揆)씨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실지조사를 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국정원측이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12건의 자료에 대해 직접 자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진상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장준하씨 의문사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서 기존 자료 외에 방대한 자료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와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했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인이 직접 자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지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국정원측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國民日報 2002. 8. 8

의문사委, 국정원 조사 무산

"정보기관 특수성 공개못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진상규명위의 김준곤 제1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10명은 이날 오전 국정원 자료보존실에서 장준하 사건 등 의문사 12건에 대한 국정원의 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지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자료보존실의 접근을 거부당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국정원측이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료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고 진상규명위가 요구하는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실지조사 거부와 관련, 진상규명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방부 등이 위원회의 한시성을 악용,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윤해기자 justice@kmib.co.kr

대한매일 2002. 8. 8

의문사委 국정원조사 무산

첫 실지조사 "자료없다" 거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려던 실지조사가 조사를 받는 기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장준하·이내창 사망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제출을 거부한 10여건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국정원측의 거부로 조사를 포기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조사단이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실지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한 뒤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자료는 없으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2002. 8. 8 한국일보

의문사委, 국정원 방문조사 실패

국정원, 자료 제출 거부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의문사 당일의 기록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정보부의 누락된 보고서 4페이지 등 의문사 관련 존안자료 확보를 위해 국정원 첫 실지조사(현장방문조사)에 나섰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국정원 측의 거부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의문사위 김준곤(金焌坤) 1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과 조사관 9명은 7일 오전 국정원을 방문, 자료 검색을 통해 존안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 측의 '보안상 불가 방침'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철수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장준하 관련 문건 등 모두 13건의 자료를 제출토록 국정원에 요청했으나 '문서실 확인불가' '자료 없음' 등의 통보만을 해와 실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국정원은 장준하 선생의 사망 전날까지의 자세한 감청내용과 동향을 담은 중정의 장준하 동향보고서(**본지 5월 8일자 29면**)를 위원회 측에 보냈지만, 사건 당일 문건에는 김일성(金日成)에 관한 70년대 일본 잡지 4장이 대신 끼워진 채, '장준하는 0월 0일 00에서 사망했다'는 한 문장만 명시되어 있어 은폐 논란을 빚고 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2002. 8. 8 노동일보

국정원 '의문사규명' 실지조사 거부

진상규명위, 과태료 부과 검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원을 방문, 의문사 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 결국 무산됐다. ▶관련기사 2면

의문사규명위는 이날 오전 실지조사를 위해 김준곤 제1상임위원과 황인성 사무국장 등 10명의 관계자를 국정원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료협조는 이미 다했고 문서보관실에서 자료를 찾는 것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국정원은 수사단장과 수사국장, 법률자문검사 등 6명의 관계자가 나와 의문사규명위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실지조사 거부에 따라 다음주부터 예정된 국방부와 기무사에 대한 의문사규명위의 실지조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실지조사를 거부한 것은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정원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국정원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문용섭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위,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문용섭(文龍燮)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明東星)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씨 사건은 1988년 6월9일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 중 회사 천인척 비리에 항의하던 문씨가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2001년 11월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 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은폐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명 검사는 6월 20일에 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현직 검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과 기강을 세울 수 없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라 위원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의문사위,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중 회사 비리에 대해 항의하는 문씨가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최근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 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은폐여부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명 검사는 6월 20일에 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현직 검사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과 기강을 세울 수 없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사건 당당 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등에 따라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황희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의문사규명위, 88년 문용섭씨 사망사건관련

수사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지난 1988년 6월 회사가 고용한 '구사대' 신아무개씨에게 맞아 숨진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당시 46살)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명동성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당시 담당 검사였던 명 검사는 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았고, 당시 광무택시 노조 조합장이 '명 검사가 사건의 은폐와 합의를 위해 상당히 개입했다'고 위원회에서 밝히는 등 사건의 은폐·축소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명 검사가 지난 6월 두번에 걸친 출석요구를 거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반론문을 통해 "문용섭씨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 사건일 뿐, 의문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의문사 규명위의 조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동행명령을 한 것은 초법적인 법집행으로 판단돼,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신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용섭씨 사건은 지난 88년 6월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항의하는 문씨를 회사쪽이 구사대인 신씨를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신씨는 단순 폭행치사죄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조사에서 "회사쪽의 사주로 문용섭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의문사규명위, 검사에 동행명령장

88년 문용섭씨 사망 관련
해당검사 "응할 이유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문용섭(文龍燮)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해 온 명동성(明東星)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 사건'은 88년 6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광무택시에 근무하던 문씨가 회사 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다.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지난해 11월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사주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 검사는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신씨의 진술을 듣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 은폐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6월 명 검사에게 두 차례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해명서에서 "당시 신씨는 회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동행 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의문사委, 현직검사에 동행명령장

문용섭씨 사건관련…명동성검사 월권 반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택시기사 문용섭씨(당시 47세)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의문사위 김준곤 상임위원은 "가해자 신모씨(47)가 재판에 앞서 명검사에게 사측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명검사는 사건을 단순폭행죄로 처리했고, '명검사가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고 당시 노조 조합장 이모씨가 진술해 이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지난 6월 두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명검사가 응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의문사위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검찰의 위상과 기강을 세우기 위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명검사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반론문을 통해 "사인이 밝혀진 사건을 조사하는 의문사위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장수기자 cameo@kyunghyang.com

의문사위, 검사에 동행명령장

1988년 사망 문용섭씨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1988년 6월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 중 회사비리에 항의하다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택시기사 문용섭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明東星)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최근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 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 은폐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 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용섭 사건은 의문사 사건이 아니며 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 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노동일보 2002. 8. 9

의문사위 현직 검사에 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관련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서울 광무택시에 근무 중 노조 민주화에 나섰던 노동자 문씨가 구사대인 신모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신씨는 당시 단순폭행치사죄로 구속돼 복역했으나 최근 의문사위 조사에서 회사측의 교사로 문씨를 폭행했다고 양심 선언했다.

이날 위원회는 "당시 명검사가 신씨로부터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도 신씨를 입건하지 않아 사건의 고의은폐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의문사 관련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 검사였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명검사는 이에대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현직검사 망신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기타 위원회 관련 보도

엉뚱한 유골을 軍복무중 실종자 판정

국과수 엉터리 감정

1987년 실종 김소진씨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DNA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유골을 군에서 의문의 실종을 당한 사람의 유골로 결론 내렸고, 군도 당시 검사가 부실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87년 육군 모 사단 유격훈련장에서 실종된 후 99년 유격장 인근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소진(당시 21세)씨 의문사와 관련,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유골의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7일 밝혔다.

국과수는 당시 발견된 유골의 주인이 김씨 유가족과 친족관계인지 DNA검사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DNA검사 없이 김씨의 사진과 발견된 두개골의 모양 분석만을 통해 김씨 본인으로 추정하고 이를 군에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헌병대로부터 결과를 독촉 받고, '이미 변사체가 인도되었기 때문에 친자감별을 시행할 이유가 없으니 양지해달라'고 군과 국방과학연구소에 통보했다.

군도 이러한 국과수의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골을 김씨의 것으로 결론짓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가 탈영할 목적으로 유격장을 이탈해 도주 중에 실족, 사망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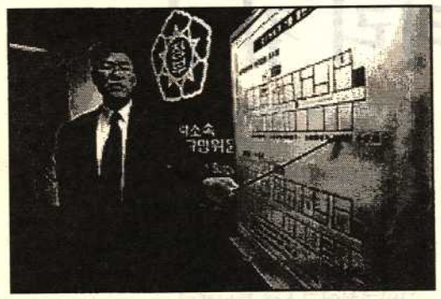
의문사위 관계자는 "발견된 유골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가족은 김씨가 탈영할 이유가 없고 몇 번이나 수색작업을 벌였던 곳에서 유골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2000년 12월 의문사위에 진상규명을 요청했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분명한 타살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길 교수 사인 최종 발표



ⓒ 시사저널 윤무영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최교수의 사인을 타살로 결론짓고 관련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5월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사건을 최종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최교수가 공권력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확증을 내지 못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핵심 용의자들이 엇갈린 진술을 하거나 회피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가 고문 가담자로 꼽은 당시 중정 수사관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차철권씨는 <신동아> 3월호 인터뷰에서 고문 자체를 부인했다. 1988년 검찰의 재조사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김상원씨는 조사를 거부했다. 브라질로 이민한 변영철씨는 현지 조사에서 최종길 교수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부인했지만 진상규명위는 1년여 동안 조사를 통해, 고문과 살인에는 중정 수사관 차철권·김상원 씨가, 고문에는 수사관 변영철씨가 가담했고, 조일제(보안차장보) 안경상 (대공수사국장) 장송록(대공수사단장) 서철신(대공수사과장) 정낙중(대공수사1계장) 권영진(수사관) 등은 차철권·김상원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고발되는 처지는 면했다. 진상규명위 한상범 위원장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 교수(경희대·법학과)는 5월29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최광준 교수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박정희·이후락 등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고문 사실을 부인한 차철권씨에 대해서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활동시한은 다가오고 '힘있는' 조사대상기관 협조거부

'벽에 갇힌' 의문사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마감시한(9월16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검찰·경찰·교도소 등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의 협조 거부, 현장조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활동이 벽에 부닥쳐 있다.

의문사규명위는 8일, 지난 6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인정된 뒤 국정원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가 직접 조사한 사건 이외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에 관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위원회에 공문서로 통고해 왔다고 전했다.

공안관련기관 짠듯이 '한통속'

국정원은 교도소와 보안감호소 안에서 벌어진 장기수 전향공작 등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해 당시 공작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와 사망자의 인물존안카드 제출을 거부했다. 전남대 학생 문승필씨 의문사(1992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이름과 나이만을 통고한 뒤,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6개월 뒤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통고해 왔다. 국정원은 또 청주신학대학생 정법영씨 의문사(1978년)와 관련된 청주지역 담당 중앙정보부 직원의 신상자료를 1년에 걸쳐서 한 가지 항목씩 통고했다.

자료제출 쩔끔찔끔 '시간끌기'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시간 지연은 위원회의 한시성을 겨냥한 것으로, 가장 지능적인 비협조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 4월2일 의문사위원회 조사관들이 노동자 박태순씨 의문사(1992년)에 대한 자료 열람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자 "국정원의 보안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기무사의 관계자는 "다른 정보기관들도 문서보존실을 공개하지 않는데 군 정보기관이 공개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현장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군대내 녹화사업에 관한 자료는 문서보존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이 기무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 서울대생 한희철씨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관이 당시 보안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자 기무사는 관련 자료의 일부를 위원회에 냈다.

또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퇴직 교도관들이 진술내용을 법무부 보안과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원회 조사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법무부가 퇴직 교도관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직교도관 진술 법무부 보고도

위원회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녹화사업 조사는 사망사건이 아니더라도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전모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85건의 의문사 사건을 접수해 그 중 4건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내일신문

2002. 7. 22

월/요/진/단 ❶ 중간점검 / 의문사 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규명위는 이들의 사망에 국가기관의 탈법행위가 작용했음을 상당부분 밝혀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협조거부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미종결사건도 63건이나 된다.

정권유지에 국가기관 총동원 입증

종결 23건 중 4건 의문사 인정 … 언론 '판죽걸기'도 걸림돌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의문사규명위가 활동시한(9월 6일)을 두 달여 남겨두고 있다.

2년 남짓된 규명위 조사활동의 성과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활동을 펴왔다"는 추정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해 활동하다 의문만 남긴 채 자살·변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상당수가 수사기관의 조사·추적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새롭게 조명됐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태동한 의문사규명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실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조사협조 거부와 위원회 내부의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22일 현재 조사 대상 85개 사건 가운데 불과 23건만을 종결처리했을 뿐이다. 위원회 스스로도 조사활동 마감시한을 두달여 남긴 시점에서 나머지 52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기관 탈·불법 드러나**= 위원회 활동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국가권력기관이 각종 탈·불법 행위까지 불사하며 권력유지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이다.

의문사 1호로 결정된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실족사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 검거과정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한총련 간부 김준배씨는 경찰이 김씨의 선후배를 돈으로 매수, 프락치 공작을 통해 은신처를 파악했으며 추락충격과 경찰의 구타가 사망의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 수사검사가 프락치 공작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매수된 김씨 선배를 구속시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군 복무 중 의문사한 사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87년 육군 모 사단에서 실종처리된 김소진씨 의문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DNA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유골을 군에서 의문의 실종을 한 사람의 유골로 결론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 공작을 벌인 '녹화사업'은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82년 9월께부터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전 시험단계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단 조작까지**= 권력유지를 위해 간첩단까지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도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위원회 조사결과,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김장현(67·당시 경제기획원 산하 분석관)씨와 김촌명(사망·당시 농수산부 공무원)씨 등은 77년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권위주의 항거, 실정법 위반 필연"

지난 9일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원회)가 한총련 간부였던 김준배씨를 의문사로 인정하고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한 데 대한 반론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김준곤(47·변호사)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의문사 위원회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문사위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 규정의 척도는 헌정 질서의 수호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 실정법은 참고사항이다. 검찰과 법원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듯 위원회의 잣대는 '헌정질서'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헌정

헌정수호 여부 민주인정 잣대

권력기관 조사협조 절실

질서를 외면한 각종 악법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태동된 대표적인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며 폐지되더라도 형법 등을 손보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이 법안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앞으로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와 70·80년대 교도소 내에서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취약점과 관련기관의 협조거부 사례 등을 취합,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 위한 결산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권력기관, 특히 국정원 기무사 검찰 교도소 등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의 자료제출 등 협조거부가 가장 큰 애로"라며 "의문사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홍식 기자*

권력기관 조사협조 거부, 난관 봉착

조사대상 88건 가운데 52건 미해결 … 검사 3명도 조사불응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의문사규명위가 난관에 부닥친 것은 권력기관이 조사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교도소 등 관련 조사대상 기관들은 위원회 출범직후부터 자료제출 등 조사협조를 거부한 데다 마감시한이 9월 16일로 다가오면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85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만 종결했을 뿐 나머지 52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사건들은 대부분 공권력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해당 권력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협조를 요청하면 일주일 지나서 관련자 이름 하나 통보해주고 또 일주일 지나서 추소 통보하는 식이다"라며 "심지어 해당 기관의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협조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정원은 청주신학대학생 정법영씨 의문사와 관련된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의 신상자료를 1년에 걸쳐서 한 가지 항목씩 통고했다.

지난해 기무사는 '이내창씨 사건'과 관련 입체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또 김준배씨 사건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영월지청장을 비롯, 3명의 검사는 모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기관의 한결같은 조사 불응은 법률로 보장된 위원회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기관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강제구인 등의 수사권한이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더 이상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녹화사업과 70·80년대 교도소 내 사망사건 등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 수집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2002. 7. 23

한겨레

한겨레가 만난 사람

'과거' 인적·물적 기득권 청산해야 화해 가능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강제수사권·처벌권 없고
국가정보기관도 비협조 어려움

9월이면 한시적 활동 끝나
70건 아직도 조사중
인권위등 이관 계속 조사를

● 한상범 위원장

법학 전수 헌법학자
한글운동·일제청산 힘쏟기도

한상범(63) 위원장은 지난 40년 동안 동국대에서 법학을 가르쳐온 헌법학자다. 황해도 개성 출생으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다.

그는 학문적 입장과 생애의 궤적이 일치하는 지식인이다. 그의 학문은 헌법 안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자유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 분야에서 그는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2001), 〈헌법이야기〉(1997), 〈한국 헌법〉(1973) 등 많은 저서를 써냈다. 그는 64년 한일협정 반대, 69년 3선개헌 반대, 72년 유신반대 운동에 참가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 그의 현실참여는 글쓰기와 행동, 양쪽에서 진행됐다.

그의 생애의 주된 관심은 학문 이외에 [illegible] 일제 청산, 한글운동, 불교시민운동 [illegible]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직을 지금도 맡고 있다. 위원회가 끝나면 그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간다. 〈친일인명사전〉을 펴내는 일은 그의 필생의 사업이다.

한글운동에 대한 공로로 94년 한글학회의 표창을 받았고, 일제청산의 공로로 2000년 외솔상을 받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의 '악'과 대결하고 있다. 악은 은폐돼 있거나 정당화돼 있다. 그래서 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풍문의 모습으로 시대의 뒷전을 빠져나가고, '의문'의 신기루들이 역사의 발목을 잡는다. 민주화가 달성됐다던 1990년대 말까지도 국토분단과 억압적 정치권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공권력의 추적을 받아왔다. 그 젊은이들은 남쪽 바다의 후미진 갯벌에서 온몸이 뱃줄에 감겨진 변사체로, 시멘트 덩어리를 몸에 매달고 물에 빠져죽은 익사체로, 또는 급박한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고층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참혹한 추락사의 모습으로 발견됐다. 그들의 죽음은 모두 자살, 수영미숙, 단순추락사로 처리됐다. 그 죽음과 공권력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은 단순한 법의학적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과거 악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미래를 여는 일이다. 2002년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그 과거의 악과 인적·제도적 연장선 위에 머물러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에 정부가 떠밀린 양상으로 2000년 7월10일 설치됐다. 유가족들은 98년 11월4일부터 422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입법을 요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강제수사권이나 처벌권이 없는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16일로 법적인 활동을 끝내게 돼 있다. 모두 85건의 '의문의 죽음'이 접수됐고 그중 70건이 아직도 조사중인 채로 위원회의 법정시한은 다가오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한상범 위원장을 만났다.

진상규명 빈약해도 그자체로 소중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청산 노력은 늘 좌절돼왔다.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광복 후 국토는 분단됐고 남한에서는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세력이 지배권력을 장악했다. 그 후 4월혁명이 5·16 쿠데타로 좌절되고 군부독재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악'을 청산하려는 모든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도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고 또 그 반대세력과 타협해가는 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인가?

=첫째는 인적 청산이다. 지나간 시절 악의 세력의 실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사회의 주도적 역할에서 후퇴시키고, 그들이 보유한 물적 정치적 기득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물적 청산이다. 아직도 이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반민주적 법률, 제도, 관행, 억압적 관료기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반민주적 이데올로기를 청산하는 일이다. 반공매카시즘의 병리적 사고와 개발독재에 대한 기만적 정치신화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용서와 화해 같은 동양적 관용으로 조화와 공존에 도달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나?

=어설픈 이야기다. 정치문제를 개인도덕 문제로 오판하지 말라. 책임과 처벌 대신 온정과 유화를 내세우는 건 기만적 논리에 불과하다.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나는 학문도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현실에 임재해 하는 것이 학문의 기초라고 할 때, 학문은 현실에 닿기 위한 투쟁이다. 더구나 개혁을 위한 투쟁은 그 주체와 그 반대세력 사이의 생사의 운명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다. 이 운명을 구체적이고도 본질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닥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한계선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가능한 화해의 방식은 영영 없는 것인가?

=있기는 있다. 우선 공권력을 동원해서, 또는 지배권력에 편승해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악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 악이 가져다준 물적 정치적 기득권을 반납한 다음에야 화해는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동의대 사건이나 한총련 부경국장 김순배 사망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때마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폭발해왔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갈등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갈등을 통과하는 투쟁이다.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동의대 사건 때 숨진 경찰관들의 참극은 국가의 공권 법집행기구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애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죽음을 대한 국민과 정부시켜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문사규명위원회는 그 안타까운 진상규명 노력에도 실적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그 빈약한 실적이라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군사독재시대와 통제 참수였던 몇 가솔자들이 여전히 그 권력적 지위를 누리고 왔다. 위원회의 권한은 없고 규명되지 않은 죽음은 산적해 있다. 의문사에 관련된 범법자나 옛 기득권층들은 의문사위원회가 시한이 돼 스스로 [illegible] 바리케이드를 [illegible] 기다리며 시간끌기로 버티고 있다.

—시간끌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피조사기관인 국가정보기관들이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나 정보를 극히 일부분씩만 찔끔찔끔 보내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등이다.

—그런 비협조에 어떻게 대처하나?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만나 협조를 호소했다. 기관장들은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하부 관료조직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공안기관들은 단 한번도 외부기관에 의해 그 직무내용을 검증받아본 적이 없었다. 결국 많은 죽음들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위원회는 시효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현장조사 거부, 비협조, 시간끌며 버티기 등의 사례를 낱낱이 모아 보고서 형식으로 국민 앞에 공개하려 한다.

—고문이나 강압적 수사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법의 권능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범죄는 애국의 탈을 쓰고 있지만, 범죄일 뿐이다. 이런 범죄에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건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진행중인 '녹화사업' 조사는 진전이 있는가?

=녹화사업은 80년대 강제징집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사상개조 작업이고, 그 방법은 고문과 강압이었다. 자료협조가 거의 안돼 피해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군정보기관뿐 아니라 당시 대학관계자, 문교부 대학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조사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악의 뿌리' 하나를 적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발이 심하고 조사는 어렵다.

'녹화사업' 조사 반발심해 난항

—시한이 다가오는데, 규명이 안된 많은 죽음은 어떻게 정리하나?

=답답하다. 시한이 급박하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서둘러 졸속으로 결론지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백기를 들고 이 문제를 역사의 미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무슨 방안이 없는 것인가?

=개인의견을 말하라면, 미결사항들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해서 계속 조사하든지, 좀더 큰 권한을 갖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원회의 한시성을 철폐하든지 등의 방안이 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정치권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협의나 문의가 없었다.

글 김훈 최해림 기자, 사진 김정효 기자 hoonk@hani.co.kr

● 인터뷰 후기

한상범 위원장의 어조는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인간의 역사와 현실을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화해, 관용, 자비, 용서 같은 타협적 언어들을 극도로 배척했다. 그러나 그는 〈불교신문〉 주필을 역임했던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지금도 전국 대학교수들의 불교신자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인간의 죄악을 함부로 용서해주는 것도 죄악일 것"이라고 그는 인터뷰 말미에 말했다. "인간의 정치현실은 종교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의 사회인식이 그의 불교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는 한마디로 답했다.

"불교의 근원은 인간의 살아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살려는 사람의 생명을 압살하고 억압하는 자에게까지 사회적 관용과 화해를 베푸는 것은 안될 말이다."

그의 전자우편함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 들어와 있다. "당신 몸 조심해야겠다"는 익명의 협박전화도 가끔씩 걸려온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 옆방에서는 '녹화사업'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조사관들이 하루종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표지석과 보이는 위원회 취하에서 위원회의 마지막 날들은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2002. 8. 6

문화일보

92년 탁은주씨 사망사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 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6일 1992년 1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운동권 여대생 탁은주(당시 20세·창원대 교육학과 90학번)씨 사망사건에 대해 계류사건중 처음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탁씨는 대학재학중 전교조 지원 및 교육운동 모임인 참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행방불명됐으며 한달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시신의 부패로 신원확인이 안돼 무연고 묘역에 묻혔다가 지난해 8월 의문사위의 유골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6일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창원대생 탁은주씨(당시 19세·여) 의문사와 관련해 조사 사건 중 처음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은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공권력이 개입됐는지가 밝혀지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살로 처리한 1992년 수사결과는 부검 절차가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사체 외부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손상도 없었다"며 "탁씨가 자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에 참여한 위원 9명 중 4명은 "탁씨의 실종과 사망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변 인물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진상규명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판결을 내린 것은 재조사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각 판정을 내린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조사할 수 없지만 불능 판정의 경우엔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탁씨는 창원대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1년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사에 참가한 뒤 실종,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사체로 발견돼 부산의 무연고 묘역에 묻혔다가 지난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여대생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첫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6일 지난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당시 19세.여)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 3월 의문사특별법 개정때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됐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는 부검 절차가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서로 보기도 부족하지만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손상도 없었다'며 '탁씨가 자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탁씨가 학과내 참교육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한 점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종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하지 못했다'며 '탁씨의 사망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에 참여한 위원 9명 중 4명은 '탁씨의 실종 및 사망에 공안.수사기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변인물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탁씨는 창원대 교육학과 2년 재학중이던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사체로 발견돼 무연고묘역에 묻혔으나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실시한 결과, 10년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south@yna.co.kr(끝)

91년 실종 여대생 탁은주씨 사망사건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씨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23건(5건 인정, 17건 기각, 1건 취하)을 결정해온 진상규명위가 '불능'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탁씨가 학과내 참교육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자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인정하기 힘들고,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인으로 판단할 손상이 없어 자살했는지 공권력 개입으로 사망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문사특별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불능'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만한 개연성있는 증거나 정황이 드러났지만 위원회의 조사권 한계 또는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증거의 인멸·소멸로 인해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탁씨는 창원대 재학중이던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배장수기자

91년사망 탁은주씨 사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1991년 실종된 뒤 숨진 창원대 교육학과 2년생 탁은주(당시 19세·여)씨 의문사와 관련,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은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3월 의문사특별법 개정때 관련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적용됐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자살로 처리한 92년 수사결과는 부검절차가 없어 인정하기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기 싫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서로 보기도 부족하지만 부검결과 사체 외부에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손상도 없었다"며 "탁씨가 자살했는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탁씨는 91년 12월 실종, 이듬해 1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익사체로 발견돼 무연고 묘역에 묻혔으며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실시,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이진희기자

졸속 출범 위원회들 위상 '흔들'

부패방지·의문사·민주화보상委 활동
조사권 한계·권력기관 비협조로 표류

현 정부 들어 생긴 각종 조사(調査) 위원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범한 데 따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힘있는 기관의 협조 거부로 조사 포기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법원이 조사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활동 위축**=전·현직 검찰 간부와 현직 장관급 공무원 등 세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서울고법이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14일 기각함에 따라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법원까지 "부방위 고발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혀, 부방위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었다. 부방위는 곧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방위 인사들은 "한달 동안 나름대로 꼼꼼하게 확인해 고발한 사안인데…"라며 허탈해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현행법상 부방위는 고발인만을 조사할 뿐이지 피고발인의 소명을 듣지 못한다"며 "당초 관련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과 하는 일이 겹치는 이런 조직을 신설하는 데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6일로 조사기한이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대상 80여건 중 4분의 1인 20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미진'이 그 이유다. 이중에는 가장 관심이 높았던 재야인사 장준하씨의 의문사 사건도 포함돼 있다.

규명위 측은 "국정원·국방부·검찰 등의 비협조로 무려기 조사 불능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면서 "출범 초기부터 관계기관들로부터 협조를 받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규명위가 지난 6월까지 확보한 자료는 2천6백여건. 그러나 핵심자료들은 대부분 빠졌다. 규명위는 최근에도 자료수집을 위해 조사관들을 국정원에 보냈지만 국정원 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지난 4월 부산 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순탄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기 활동시한이 마무리돼 지난 9일부터 2기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늦어져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동의대 관련 논란 이후 이 위원회의 결정방식 등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재심절차 신설 등의 대책마련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인과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다 정권 말기가 되면서 위원회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기관들의 지나친 견제와 비협조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방위 간부는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관련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는 등 곳곳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문사진상위의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등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예상됐다"며 "제 역할을 기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법원 "여권 발급 일방 거부통지 잘못"

재일 한통련 10여명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0일 재일동포 조직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곽동의 의장) 사무총장 김아무개씨 등 10여명이 '여권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부가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는 물론, 불복절차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전화 통지만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협의 없이 거부처분을 내리는 등 절차상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외교부의 처분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서, 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한통련의 명예 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강만길)의 결성식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대사관에 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朝鮮 데스크

'의문死' 규명의 어려움

경찰서를 출입하던 초년병 기자 때다. 형사계 사무실의 구석방에는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용도가 늘 궁금했다. 어느날 한 형사가 자물쇠의 다이얼을 돌려 그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광경이 목격됐다. 지켜보는 기자를 향해 그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런 뒤 "한번 구경하겠소?"라며 캐비닛을 활짝 열었다. '미제'(未濟: 사건을 해결하지 못함)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힌 수사 서류철이 안에서 쏟아져 내렸다.

기자는 적지 않은 사건을 쫓아다녔다. 어떤 현장에는 유류품도 남아 있고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베테랑 형사의 직감에 과학적인 수사 기법까지 동원된다. 수사본부를 차려 며칠째 밤새우는 잠복근무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수사기록은 누더기가 되고 붉은 스탬프가 찍히는 것이다.

崔普植

2년 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을 때 누군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라고 했다. 세월에 파묻힌 의문의 죽음을 풀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평생 가슴 속에 무덤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의 기대는 어떠했겠는가.

압수·수색권 없는 위원회

그러나 위원회가 발족해 한 건의 실적(實績)을 내는 데 6개월 반이 걸렸다. 그것도 한 대학생의 의문사를 단순 사고사로 판명한 것이다. 과거의 수사 결론 그대로였다. 유족들의 실망에 대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전체 예산 48억원, 인력 95명인 의문사위원회가 이룬 성과의 비효율은 또 어떤가. 당시 위원장에게 "의문사 1건 당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수사관 1~2명이 몇 달씩 매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따졌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았다. 경찰서에 있던 '미제' 사건의 캐비닛을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 위원회의 형편을 알고 나면 더욱 씁쓸하다. 위원회 조사관은 직접 사건 관련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2년간 83건 신청, 24건 종료

증언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도 제재 수단이 거의 없다. 증거를 확보할 압수·수색권조차 없다. 게다가 현행 법률로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16일로 마감된다. 길을 나서니 해가 지는 격이다. 한 관계자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애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 위원회는 신청된 83건 의문사 중 24건을 종료했다. 정작 문제는 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권위(權威)다. 위원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종 진실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의 평가는 다르다. 위원회가 내린 의문사의 결론에 대해 또 하나의 가설(假說) 혹은 추리쯤으로 받아들인다. 얼마 전 발표된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사건도 그렇다. 위원회는 1984년 군부대 안에서 집단 모의에 의한 타살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 그 결론은 논란 중이다.

위원회가 정의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이는 없다. 또 짧은 기간에 하나라도 '진실'에 더 접근하려는 그 열정은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그걸 구현하는 조사는 냉철하고 사실에 의거해야 한다. 재작년 우리 의문사위원회의 모델이 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에서 활동한 파즐 란데라 박사가 방한한 적이 있었다. 그는 "수십년간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짧은 기간에 다 밝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고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고 고백했다.

간혹 정직한 실패의 메시지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

/사회부 차장대우 congchi@chosun.com

너무 반가운 의문사위 관련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상당수 의문사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는 의문사위 활동시한 연장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문사위가 친일세력에 의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반민특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3일자 '의문 못푼 의문사위'(1면)와 집중기획 '의문사 진상규명'(5면)은 너무 반갑고 자랑스런 기사다. 역시 경향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기사 중간중간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직접 국정원이나 기무사와 같이 자료 제출을 꺼리는 곳을 상대로 직접 취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왜 의문사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지 이들 관련기관을 상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쉽게 취재에 응해주지는 않겠지만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도 취재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문사위의 활동을 연장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보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감지해 내고 추적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연히 '명백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경향의 노력이 이 사회가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값진 토양이 돼 주길 바란다.

윤익한 / 대학생 yunik77@ hanmail.net

92년 의문사 박태순씨 '진상규명 불능'

'軍기관 관련' 의혹불구 영구미제 빠질 가능성

민변등 공소시효 배제촉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활동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92년 노동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박태순씨(당시 26세) 사건이 시간 부족으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게 돼 앞으로 숱한 진정사건들이 박씨의 경우처럼 '영구미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씨 사건과 관련, "박씨의 죽음에 기무사가 관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이 임박한 데다 조사권한마저 미약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김준곤 상임위원은 "기무사가 군내 좌경세력척결을 목적으로 한 '마파람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실지조사를 거부하고, 박씨의 내사를 담당했던 기무사 요원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미약해 진상규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박씨에 대한 내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구 기무사 방첩과 소속 군무원 이모씨로부터 사고가 난 며칠 뒤 동료 추모 중사가 '내사대상자였던 박씨가 전철역에서 죽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마파람사업'은 대상자를 좌경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해 접촉인물까지도 면밀히 관찰하도록 해 군내 활동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벌였다"며 "박씨의 경우도 불법적으로 행해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측은 "당시 추모 중사가 방위병 이씨와 관련있는 박씨에 대해 신원확인차 경찰청 신원기록을 열람한 뒤 민간인 신분임을 확인하고 바로 종결처리했다"면서 "90년 윤석양 사건 이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신대 철학과를 중퇴하고 수원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박씨는 92년 8월29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으나 의문사위 조사결과 금천구 시흥역 경부선 하행 선로에서 열차에 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13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홍욱기자

"92년사망 박태순씨 기무사서 내사"

의문사위, 진술 확보

1992년 실종된 노동운동가 박태순(朴泰淳·당시 25세)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기무사의 내사를 받았으며, 박씨의 사망사실을 당시 내사를 담당했던 기무사 요원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일 박씨를 내사했던 기무사 군무원 이모씨로부터 "동료 중사가 92년9월 초순 '내사 대상자였던 박태순이 전철역에서 죽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기무사는 군 입대자에 대한 좌경활동 감시 사업인 '마파람 사업'을 추진, 민간 관련자에 대해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집중 사찰에 나섰다"며 "박씨에 대한 내사도 박씨 대학 동기의 방위 입대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기무사의 실지조사 및 마파람 사업 자료 협조 거부로 기무사의 사건 개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기무사는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이후 대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92년 한신대 박태순씨 열차사망

"기무사 알고 있었다"

당시군무원 의문사委 진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92년 8월 시흥역 선로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뒤 신원불명자로 처리됐다 지난해 규명위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박태순(당시 25세·한신대 철학과 2년 중퇴)씨가 91년 8월부터 열차사고로 숨지기 직전까지 기무사의 사찰을 받았던 사실이 당시 기무사 군무원 이모씨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규명위는 "당시 군무원 이모씨로부터 박씨의 내사 담당자였던 기무사 중사 추모씨가 92년 9월 '내사대상자였던 박태순이 전철역에서 죽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박씨의 죽음에 기무사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서울 기무부대가 91년 방위병 이모씨를 내사하면서 박씨의 신원기록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신분이 확인되자 내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이철규씨 조선대 교지편집장 89년 의문사
박창수씨 한진重 노조위원장 91년에 변사

이철규씨

박창수씨

조선대 교지인 '민주조선' 편집위원장 이철규씨(사망 당시 25세)는 교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 때문에 1989년 4월18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5월3일 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부근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은 뒤 1주일 만인 10일 검문 장소에서 76m쯤 떨어진 수원지 물 속에서 숨진 채 발견돼 노태우정권의 대표적인 의문사로 떠올랐다.

당시 수사 당국은 사망 원인을 익사라고 발표했으나 온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데다 오른쪽 어깨가 크게 부어 이씨가 타살돼 물 속에 버려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도 그 해 6월1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사인 규명의 핵심인 재부검 요청을 검찰이 거부, 사인이 끝내 미궁에 빠졌다.

1991년 2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인 박창수씨(사망 당시 31세)는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를 이끌다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원인 불명의 머리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5월6일 경기 안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박씨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병원 6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고 결론지었으나 한진중공업 노조원 2,300여명은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수개월간 파업하는 등 당시 노정 갈등의 핵이 됐다. 특히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郎) 교수는 지난 8월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한쪽에서 가격할 때 생기는 양면성 압박으로 인한 골절과 심폐 파열이 박씨의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타살 가능성을 더했다. 박영환기자

89년 변사 조선大 이철규씨
의문사委 "타살 가능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89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경찰의 수배를 받던 중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씨(당시 24세)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물에 빠뜨려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씨의 시신 사진을 감식한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滋太郎)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며 "누워 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미야마 박사는 "직접 사인은 익사지만 이전에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상처를 입은 뒤 물에 빠뜨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광주지역 안기부 직원에게서 "88년 민주조선 가안본을 분석한 결과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과로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씨 사망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요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권호욱기자

의문사委 최종설명회

의문사위의 조사 기간 종료를 사흘 앞둔 13일 서울 수송동 의문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 단체 최종 설명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철규 의문사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철규·박창수씨 사건 '진상규명 불능' 발표
유족·시민단체 거센 분노

최종길·장준하·이내창씨와 더불어 '빅5 의문사'로 불릴 정도로 독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의문사인 이철규·박창수씨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발표가 13일 무산되자 그 가족과 관계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거센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철규씨 사건 등이 '진상규명불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의문사위가 지닌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며 의문사위의 조사활동 시한을 반드시 연장해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규씨 아버지 정진씨(73)는 "의문사위가 기득권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 반발로 '제2의 반민특위'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씨의 어머니 황정자씨(68)도 "오늘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살아 왔는데 수영을 아주 잘하던 아들이 익사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어처구니없다"면서 "10여년 동안 모든 생활을 포기한 채 진상규명에 나선 게 물거품이 됐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의문사 희생자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 불능'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범죄'에 가담한 권력기관들이 '시한부 인생'인 의문사위의 활동 시한이 끝나기만 기다리며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활동 기간 연장은 물론 조사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권력기관의 비협조와 방해가 집요하게 펼쳐졌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반드시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차장도 "국회에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씨사인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1년간 감옥생활을 한 정동년씨(59)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 위원회가 독자적인 '특별검사'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명재·안홍욱·신현기기자

89년 변사 조선대생 이철규씨

"폭행당한뒤 익사 가능성"

의문사규명委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지난 1989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수배를 받고 피신하던 중 광주지역 한 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당시 24세)씨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물에 빠뜨려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上山 滋太郞)씨는 의문사위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며 "누워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미야마씨는 "직접사인은 익사지만 이전에 이미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상처를 입은 뒤 누군가에 의해 물에 빠뜨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문사위의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71년 DJ교통사고 베일벗나

의문사委 "당시 목포 공화당후보가 배후" 진술 확보

지목인물 "사고 며칠후 알아" 부인

1971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당한 의문의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현대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 그런데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3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의 배후인물을 연급한 진술을 확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의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보행이 불편한 김 대통령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 기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배후 여부 등은 베일에 싸여있다.

의문사규명위는 15일 "71년 전남 목포 선관위 직원이었던 김창수(金昌洙)씨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해 8대 총선 목포지역 공화당 후보였던 강모씨를 배후로 지목한 전문(傳聞)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씨와 같은 목포 해병대출신자모임(청룡회) 회원 정모씨가 '강씨 선거운동에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박모(78)씨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병대를 감은 채 영등포 지역 야당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원회는 이 사건이 의문사가 아닌데다 활동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단 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 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가 확보한 정씨 진술에 따르면 같은 해병대 원로인 강씨와 박씨가 최근 사이가 나빠지면서, 박씨가 가까운 회원 김모씨에게 "사실은 강씨가 71년 김 대통령 교통사고를 지시한 당사자"라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정씨가 김씨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의 골자는 "한국전 서울수복 때 최선두로 진격,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은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박씨가 2000년 12월 강씨가 이를 폄하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들고는 '당신이 71년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장본인인 줄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놀란 강씨가 박씨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다른 회원들도 김씨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뒤 위원회에 정식조사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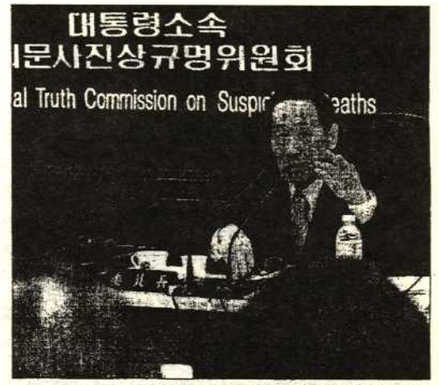
이와 관련, 박씨는 본보기자에게 "강씨가 나를 폄하하고 다니는데 화가 나 김 대통령 교통사고에 그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해병대 후배들의 증재로 강씨가 사과해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71년 총선 때 나는 김대중씨가 목포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며 교통사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언뜻 들었다"고 부인했다. 강씨는 5·16쿠데타에 참여, 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위원장을 거쳐 해병대사령관과 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98년 국민회의에 입당, 현재도 민주당적을 갖고있다.

당시 김 대통령이 탄 승용차와 충돌한 14톤 덤프트럭 운전사 권모(67)씨도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강씨는 모른다"며 "김대중씨가 타고 있었는지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배후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71년 강씨의 경호를 맡았던 강모씨는 당시 "강씨는 공화당 후보로서 정보기관들을 사조직처럼 거느리며 수시로 선거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DJ가 목포에 온 것도 몰랐다는 얘기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의문사위 오늘 종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일인 15일 한상범 위원장이 상임위원 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조사해 온 사건들을 서둘러 정리점검하고 있다. · /원유현기자

"배후설 제기됐지만 입증할 단서 못찾아"

■ 당시 검사 허경만씨

1971년 목포지청 검사로 이 사건을 조사했던 허경만(許京萬) 전 전남도지사는 16일 "당시 배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 당시에도 배후설이 무성했는데.

"트럭 운전자가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일단 그에 상응하는 구속만 하면 된다고 봤다."

- 당시 신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조사했나.

"배후가 있다면 사고낸 운전자나 사주한 사람이 자백을 했어야 했다. 정황만 갖고는 곤란한 것 아니나."

- 운전자는 철저히 조사했나.

"사고 차량은 목포에 있는 점을 실으러 가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했다. 차량 회사가 공화당 전국구의원 소유라는 것은 알았지만 관련됐다는 단서가 없어 거기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의혹을 갖고 조사했지만 입증할 수 없었다."

- 당시 공화당 후보 강모씨가 배후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름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안됐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 DJ 교통사고 중앙선 넘은 트럭 피하려다 추락

1971년 5월24일 오전 9시30분께 전남 무안군 국도에서 목포지역 총선 신민당후보 지원유세를 마치고 광주로 가던 김대중 대통령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해 오는 14톤 덤프트럭을 피하려다 논에 처박혔다. 김 대통령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트럭과 정면충돌해 신혼부부와 운전기사 등 3명이 숨졌다.

이 사건에선 처음부터 암살의혹이 제기됐다. 71년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김 대통령의 출신구인 목포지역 총선승리를 위해 정보기관, 경찰, 폭력배까지 동원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사고 트럭이 공화당 의원 소유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해갔다.

사고 운전자로 구속됐던 권모(67·현 부산 거주)씨에 대해서도 "진짜 운전자는 사고 후 도망가고 조수만 남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으나 지금껏 의혹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

/정원수·이진희기자

"DJ 71년輪禍 舊공화후보가 배후"

의문사위 "간접진술 확보"
신빙성 미흡 판단 조사보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지난 71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한 교통사고의 배후로 8대 총선 목포지역 공화당 후보였던 강모씨를 지목한 전문(傳聞)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강씨와 같은 목포 해병대 출신자 모임 회원 정모씨로부터 '강씨의 핵심측근 역할을 했던 박모(78)씨가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진술을 지난 4월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강씨와 박씨의 사이가 최근 나빠지면서 박씨가 또 다른 회원 김모씨에게 '강씨가 71년 김 대통령 교통사고를 지시한 당사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규명위는 그러나 정씨 진술 자체가 제3자에게 전해들은 '전문 진술'인 데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사도 '우발적 사고였으며 강씨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명위는 정씨의 조사요정에 대해 '의문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71년 5월24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무안군 국도에서 김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14t 트럭을 피하려다 논에 처박혔다. 사고 후유증으로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고 직후부터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기도"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강씨는 "당시 김대중씨가 목포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했다. 강씨는 5·16 쿠데타에 참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위원장을 거쳐 해병대 사령관과 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71년 DJ교통사고 의문풀리나

"당시 공화당후보가 배후" 진술나와

당사자 "터무니없는 소리"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한 의문의 교통사고와 관련, "당시 8대 총선 목포지역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강모씨가 이 사고를 일으킨 배후인물"이라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전남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김창수씨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전언증언을 녹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후인물이 강씨임을 외부에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71년 총선에 출마한 강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박모씨"라며 "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은 이 같은 내용을 박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김모씨의 진술을 건네들은 정모씨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정씨 진술 자체가 제3자에게 전해들은 '전언진술'인데다 사안 자체가 '의문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 아래 '조사보류' 결정을 내려둔 상태이다.

한편 사건 배후로 지목된 강씨는 "당시 김대중씨가 목포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DJ교통사고'도 며칠 후에야 알았다"고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황현택기자archide@sgt.co.kr

'DJ 교통사고' 베일벗나

의문사委 "71년 목포 공화당후보가 배후"

1971년 김대중(金大中)이 당한 의문의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현대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 그런데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3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의 배후인물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의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보행이 불편한 김 대통령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암살 기도"라고 주장해왔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배후 여부 등은 베일에 싸여있다.

의문사규명위는 15일 "71년 전남 목포 선관위 직원이었던 김창수(金昌洙)씨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해 8대총선 목포지역 공화당 후보였던 강모씨를 배후로 지목한 전문(傳聞)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씨와 같은 목포 해병대출신자 모임(청룡회) 회원 정모씨가 '강씨 선거운동에 핵심참모 역할을 했던 박모(78)씨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의문사가 아닌데다 활동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단 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사재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위원회가 확보한 정씨 진술에 따르면 같은 해병대 원로인 강씨와 박씨가 최근 사이가 나빠지면서, 박씨가 가까운 회원 김모씨에게 "사실은 강씨가 71년 김 대통령 교통사고를 지시한 당사자"라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정씨가 김씨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의 골자는 "한국전·서울수복 때 최선두로 진격,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은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박씨가 2000년 12월 강씨가 이를 평하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당신이 71년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장본인인 줄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놀란 강씨가 박씨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다른 회원들도 김씨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뒤 위원회에 정식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씨는 본보기자에게 "강씨가 나를 평하하고 다니는데 화가 나 그가 김 대통령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해병대 후배들의 중재로 강씨가 사과해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71년 총선 때 나는 김대중씨가 목포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며 교통사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언뜻 들었다"고 부인했다.

강씨는 5·16쿠데타에 참여, 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위원장을 거쳐 해병대사령관과 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98년 국민회의에 입당, 현재도 민주당적을 갖고있다.

당시 김 대통령이 탄 승용차와 충돌한 14톤 덤프트럭 운전사 권모(67)씨도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강씨는 모른다"며 "김대중씨가 타고 있었는 지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배후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71년 강씨의 경호원이었던 강모씨는 "강씨는 당시 공화당 후보로서 정보기관들을 사조직처럼 거느리며 수시로 선거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DJ가 목포에 온 것도 몰랐다는 얘기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國軍을 상대로 한 의문사위원회의 인민재판식 엉터리 조사를 규탄한다!

- 국민 여러분, 친북이적단체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했던 의문사 위원회가 국군을 살인·은폐집단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BC, 한겨레 신문 등 일부방송과 신문들은 허원근 일병이 타살된 뒤 자살로 은폐되었다는 의문사측의 의문투성이 발표를 진실이라고 단정, 보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졸지에 살인범으로 내몰린 당시 하사관, 은폐 가담자로 몰린 사병들, 은폐지시자로 몰린 장교들은 힘을 모아 오보를 한 방송과 신문, 엉터리 수사를 진행한 의문사측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과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자!

[illegible]

5. 이번 허일병 사건을 보도한 MBC-TV 9시 뉴스는 '사체에 추가로 총질까지 해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군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수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여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우리국군은 회복할 수 없는 명예의 훼손을 당했습니다.

6. 우리는 이번의 엉터리 발표와 보도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가들과 상의하여 법적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언론의 오보와 의문사 위원회의 발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국민 여러분, 남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군과 애국세력 흠집내기에 앞장서고 있는 어용언론의 보도를 믿지 맙시다. [illegible] 국군을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국군은 여러분들의 [illegible] 조직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2002. 9. 17.

친북좌익세력 명단공개 추진본부
본부장 /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 후원 / 참여단체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이철승 / 전, 신민당 당수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장 채명신 / 전, 주월한국군사령관
육사 8기총동창회	회장 오학진 / 전, 국회의원, 예비역장군
육사 10기총동창회	회장 양창식 / 전, 국회의원, 예비역장군
대한민국참전 경찰전우회	회장 문태동 / 전, 경찰국장
국사모(국가사랑모임)	회장 송영인 / 전, 국가정보원 해주 부지부장
한국 근우회	회장 이희자 / 여성단체
자유언론수호국민모임	대표 이종식 / 시사평론가
대한 6·25참전부사관연맹	회장 최종대 / 전 한국전참전군인연맹 사무총장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 노혁우 / 북한민주화촉진협의회 이사장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김덕수 / 전, 육군본부군종감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박근 / 전, UN대사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장 정병목
호국 6·25전상 동지회	회장 이해달
한국노동협회	이사장 김관호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 예비역대령

"의문사규명 멈출순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16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규명위의 조사권한 강화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kdaily.com

장준하·이철규·이내창·박창수씨 사건

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능" 결정

19건 의문사 인정… 활동 종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씨 사망사건과 관련, "권한미비와 조사기간 부족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내창·이철규·박창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29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준하씨의 경우 재야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길·장준하 사건과 함께 이른바 '의문사 빅5'로 꼽혔던 이철규·이내창·박창수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죽음에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규명위는 지난 1981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다 숨진 전정배씨 사건 등 9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규명위는 83건의 조사 사건 중 취하 1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해 19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33건은 기각했으며 30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장준하·이내창·이철규·박창수 의문사

'진상규명 불능' 결정

의문사委 "공권력 개입 확인할수 없어"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배상 권고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숨진 채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또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의문사로 꼽힌 이내창 이철규 박창수씨 사건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역사속에 묻히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전체회의 결과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재야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조선대 교지편집장으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시 거문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서 구치소에서 부상한 뒤 병원에서 숨진 박창수씨도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진정 및 직권조사한 83건 중 취하 1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해 19건이 의문사로 인정되고 33건이 기각됐으며 30건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14일부터 집중심의를 벌여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9건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건인 '의문사'로 추가 결정했다.

1980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전씨는 육군 모사단에서 교육받던 중 이듬해 6월 감호생 소요사태로 총상을 입은 후 사망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전씨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었다.

진상규명위는 "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정부에 권고했다. 하윤해기자

전정배씨 사망등 19건 '의문사' 인정
장준하씨 사건등 30건은 '규명불능'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씨 사건을 비롯, 80~90년대의 학생 및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의문사로 불리는 이내창, 이철규, 박창수씨 사건이 끝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장준하씨가 재야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중정이 장씨의 죽음에 어떻게든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이철규씨(당시 조선대 교지편집장)와 이내창씨(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창수씨(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3명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그 죽음에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하지만 지난 14~16일 집중심의를 거쳐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다가 감호생 집단난동 사건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중 숨진 전정배씨에 대해 국가가 위법하게 시행한 삼청교육 대상자로 끌려간 뒤 감호소에서 구타 중단, 귀가 등을 요구한 것은 권위주의에 항거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또 지난 88년 후지카 대원전기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측 구사대의 파업농성 강제해산에 항의해 회사 간부의 방에서 음독자살한 오범근씨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의문사위가 진정 또는 직권조사한 83건중 19건이 의문사로 인정됐으며 나머지는 33건 기각, 30건 진상규명 불능, 1건 진정취하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 불능의 원인이 이날로 끝난 조사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아 그 유족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70~80년대 민주화운동 지원 해외인사 60여명 새달 내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조작 등 70~80년대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해외 인사 60여명이 국내 단체의 초청으로 다음달 방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朴炯圭)는 24일 지난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고문조작설을 처음 제기했다가 유신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된 조지 오글(사진·73·한국명 오명걸)목사와 제임스 시노트(73)신부가 오는 29일과 다음달 14일 각각 방한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공안당국에 의해 '친북인사'로 분류돼 독일 등에서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의 방한도 추진중이다.

초청인사에는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폐기 빌링스 목사, 지난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서 인권상을 받은 패리스 하비 국제노동권리재단 사무총장, 재일 한국인 정치범 구명운동을 펼쳐온 오카모토 하츠시(岡本厚) 세카이지 편집장, 볼프강 슈미트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김동건(82) 전 김대중 구출위원회 위원장, 지창보(79) 전 미주 민주한인협회 위원장, 윤택순(72) 전 광주의거기념사업회 창립회장 등 재미 인사들도 초청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민주화운동 사례 발표, 민주화 유적지 탐방 등에 참석한다.

오글 목사는 74년 10월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강제추방됐다.

당시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반했다."며 추방을 정당화했지만 유신 정부는 한동안 국제여론의 뭇매에 시달렸다.

미국 듀크신학대학을 졸업, 54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오글 목사는 60년부터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음달 한국인권문제연구소로부터 제5회 한국인권상을 받는다.

◉이세영기자

"27년 옥살이 끝낸 느낌"

'인혁당 구명운동 추방' 美시노트 신부 새달 방한

"마치 27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난 느낌입니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고문 조작설을 제기하고, 구명운동을 벌이다 유신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당한 제임스 시노트(73·한국명 진필세)신부는 24일 대한매일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을 '옥살이'에 비유했다.

의문사위 발표 사필귀정 떠올라

그는 추방 이후 10년 남짓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고 강연활동을 벌이며 사건의 진상을 알렸다.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는 실로 놀라운 뉴스"라면서 "TV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사필귀정'이라는 한국의 고사성어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시노트 신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뛰어든 것은 74년 각계 인사를 방문, 구명운동을 벌이던 수감자의 부인들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들과의 만남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기억하는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라는 영감을 불어 넣어준 사람들"이라고 돌아봤다. 이후 1년 남짓 사형수 가족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제임스 시노트 신부

사형수 사체 인도 경찰과 실랑이

75년 4월10일 사형수들의 사체 인도를 거부하는 경찰과 시노트 신부가 벌인 실랑이는 너무나 유명하다. 경찰은 고문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체를 유족에게 넘기지 않고 벽제 화장터로 직행하려 했다. 이에 격분한 시노트 신부가 장의차 바퀴 밑에 누워버리자 경찰은 그를 발길질하며 마구 끌어낸 뒤 화장터로 차를 몰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시노트 신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고, 75년 4월 '비자갱신 거부'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는 "관계 당국에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한국을 떠나기까지 단 이틀이 주어졌다."고 전했다. 주한 미 대사관측이 한국의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추방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회유했지만, 시노트 신부는 이를 일축했다.

10년간 강연활동… 두차례 체포

그는 출국 직전 사형수 가족들을 만나 "끔찍한 범죄행위를 목이 쉬도록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역만리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두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어찌 사형수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노트 신부는 미국 메리놀 신학교를 졸업한 뒤 61년 인천 답동성당의 보좌신부로 부임, 섬주민을 위한 의료활동을 벌이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다음달 14일 방한하면 함께 눈물을 흘렸던 유족들부터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軍 의문사수사에 민간 참여를

나는 육군 예비역 병장이다. 80년대에 군대에 갔다왔다. 그러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허원근 일병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타살로 발표한후 지금까지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는걸 보면서 살아 돌아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아직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군내 사망사고 조사 규정을 손질하는 것 뿐이라고 본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군 검찰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기소 여부 결정도 사단장 결재를 맡게 돼 있다. 따라서 군 검찰권의 독립성은 사단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군내 사고라도 일반 검찰·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군의문사를 제대로 처리해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군 검찰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미군 정도라고 한다.

이젠 우리나라도 군 의문사 수사에 민간인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군 의문사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창익·서울 서대문구

의문사규명委 부활시켜야

MR 기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지난 16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이 만료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과거 부당한 공권력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일선 검·경들의 과잉충성으로 고문을 당해 사망하고 실종사 또는 자살로 위장, 조작된 사건들을 일부 밝혀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진정사건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바쁘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과 관련 단체 대표자들은 의문사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며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앞으로 농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문사' 문제를 밝히는 일은 미래의 '의문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의문사를 밝히는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조사시한에 밀려 조사를 끝내는 것은 바로 가해자가 시효를 넘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법화시켜 주는 부도덕한 행위다.

우리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집단적이고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의문사법 개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처사이다.

의문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과제를 청산하려는 살아 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정당한 책무이자, 가장 성스러운 임무이다. 민주당은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여야 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정사건 가운데 많은 경우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조사활동을 끝내고 있다. 조사 불능의 이유는 두가지이다. 한가지는 의문사의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고, 또 하나는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만한 권한이 거의 없어 관련 당사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기각'한 사건도 많이 있다. 사인이 밝혀지고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당연히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인'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민주화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사인과 사망 배경의 실체를 접근하지 않은 채 도식적인 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의문사법의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되, 이번 개정에는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는 피조사자에 대해 강제구인권과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권 등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의문사 사건은 과거의 감춰진 사건을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당연히 조사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 의문사 사건은 과거 공권력이 개입돼 있는 문제다. 공권력을 상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 이의신청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듭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하기 때문이다.

불신받는 군의문사 수사 해결책 없나

지광준/강남대 법학과 교수

군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처리 해주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옳다. 또한 변사자 처리를 위해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부대 안이라도 현장을 공개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설명이 꼭 있어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8년 전 자살로 처리된 '허원근 일병 사건'을 타살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군 복무 중 숨진 군인들의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 군 전체 사망사고의 40~45%를 차지하는 자살 사고에 대해 이의 제기 등의 항의가 더욱 빗발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멀쩡하던 아들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로서는 억울하게 죽은 것도 서러운데 갖은 불명예를 덮어씌워 자식이 자살을 했다니 슬픈 심정이 더하고 원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군대는 폐쇄된 곳이다. 유가족들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으나 접근이 어렵다. 수사할 때 군의 보안을 강조해 공개를 꺼리니 부정확한 사실들이 전해지기 쉬울 것이다. 앞뒤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전달되는 사건 내용은 오해될 부분이 많다. 사망자의 동료 장병들이 우연히 유가족과 만나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수사발표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실제 군 수사가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받을 소지는 많다.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과 수사지휘와 감독권한을 가진 검찰이 같은 사단장의 지휘권 안에 있다. 지휘관의 의지가 수사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휘관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승진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조작을 유도할 가능성도 많다. 변사자 사건의 경우 주검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는 법의학자들이 군 전체에 2~3명이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사자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부서나 수사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나름대로 성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 조작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 또 대형 사건·사고가 아닌 단순한 사망사고는 상급 지휘관들에게 그리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사자 처리는 최초 현장에서부터 수사종결까지 헌병은 군 검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사체처리 역시 군 검찰관의 수사지휘에 따른다. 이들 군 검찰관은 사법 시험이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친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타살을 자살로 조작하는 데 협조하리라는 생각은 상식 밖의 일이다.

변사자 사건은 조사 기한이 규제되어 있지 않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군내 사고라도 일반 검찰·경찰이 수사를 맡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의 군 체계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군의 존재는 전쟁을 전제로 한다. 군 내부의 사건·사고까지 일반 검·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징병되어 정신·육체적으로 억제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며,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구타·따돌림 등을 당해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자살이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제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처리를 해 국가에서 보상해야 옳다. 그래봐야 연간 50명 미만이다.

또한 변사자 처리를 위해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법의학자들을 더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부대 안이라도 현장을 공개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설명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식 잃고 가슴에 피멍든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조선일보는 진실을 보도하라

25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조선일보 규탄대회'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자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와 참가자들이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일권 기자 pt999@laborw.com

"조선일보는 의문사 왜곡보도 중단하라"

유가족단체·안티조선시민연대 등 규탄집회

언론학자 '안티조선 지지' 선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25일 정오 서울 광화문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규탄집회를 열고 "조선일보는 허원근 일병 사건의 취재 과정에서 협박에 가까운 유도 질문으로 핵심 증언자의 증언을 번복케 했다"며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음해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일보 9월11일자 2면 참조)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이며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공권력의 인권유린을 눈감아온 과거 행적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대회의는 "월간조선 10월호에서 조갑제씨는 '왜 전문 수사능력이 없는 위원회의 발표를 의심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며 "조선일보는 위원회의 능력과 조사결과를 의심하기 전에 위원회 활동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준만 전북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조항제 부산대 교수 등 전국 언론학자 34명은 이날 '안티조선지지' 언론학자 선언문을 발표했다.

언론학자들은 선언문에서 "최근에 법원이 일관성이 결여된 관결로 언론권력의 편을 들어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결정을 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우리 언론학자들은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상식이 회복되고 민주화가 완성되는 데 계속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열린세상

홍 두 승
서울대 교수
사회학

軍 의문사 신중접근 필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인 기구로 출범한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지난 16일로 22개월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 위원회는 유족들의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해 82건(진정취하 1건 제외)을 조사해 이 중 33건은 기각하고, 30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지었으며, 19건에 대해서만 의문사로 판명했다. 조사기간이 부족하고 여건도 불비하여 많은 사건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아쉬움만 남긴 채 활동을 접고 말았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으리라.

예단해서 결론 말아야

의문사진상 규명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 중의 하나가 군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 20여건 있었지만 특히 허 일병의 사건이 세인들의 주목을 끝게 된 것은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을 두고 타살을 자살로 조작, 은폐한 것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첫 총격을 당한 후 추가의 '확인사살'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여운까지 남겼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간단히 결론내릴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하였다. 의문사위도 '추가 총격을 가한' 사람과 경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던 어느 부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외쳤다. 당시 주변에 있었다는, 지금은 전역한 다수의 병사들도 타살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 수사계장은 최근 한 월간잡지와 인터뷰에서 의문사위의 발표가 터무니없다고 항변하고 위문사위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참전단체 등 군 관련 재야단체들도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노출된 사건일 경우, 이를 은폐하려 해도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조작, 은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따라서 목격자나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예단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설사 조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매우 신중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야 하리라 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조사 중간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가져왔다. 이 사건의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사건 당시 군 자체 조사결과 소속 중대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감제 전역되었지만 그 부사관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군 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의문사위에서 혐의를 받고 있던 그 부사관이 진실로 무관하다면 짓밟힌 그의 인권은 누구로부터 보상받나. 또한 실추된 군의 명예는 어디에서 보상받나. 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부당하게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상시적 조사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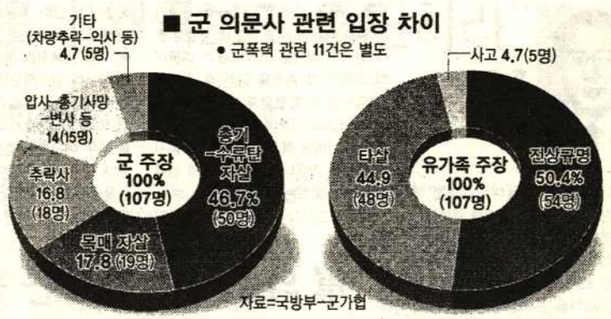
아울러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군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차제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 발생한 여타 의문사에 대해서도 군이 보다 전향적으로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실규명은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의문사위 활동시한 종료로 의문사 규명을 도외시하지 말고 초헌법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적법하고 상시적인 기구를 두어 의문사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난 수해복구 시 발진상태에 이르도록 헌신적으로 복구 작업에 참여한 장병들의 사기에 행여나 영향을 미칠지 모를 군 관련 보도에 여러 언론매체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軍內사망 수사 구조적 문제점

"성식이가 자살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강원도 삼척 23사단 58연대에서 1발의 총격으로 자살한 박성식 일병(22)의 어머니 김미숙(47)씨. 사고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는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다 대구에서 상경, 국방부앞에서 피묻은 소복을 입은 채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4시간내 총장에 원인보고 의무화
미리 결론낸뒤 과정 짜맞출 가능성
타살땐 지휘선 연대책임도 진실규명 걸림돌

김씨가 국방부 인근에 여관방을 잡아두고 하루 12시간씩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고당시 '박 일병이 함께 근무하던 최모 상병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4발의 공포탄과 2발의 총탄을 쏴 사살시킨 뒤 자살했다'는 군부대측의 수사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과 관련, 군측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허원근 일병 사건이 18년만에 타살 및 부대원의 조직적 은폐로 밝혀진 이후 유가족들은 자신의 아들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현재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에 접수된 군의문사-군폭력 건수만도 무려 120여건. 허 일병 사건 발표 뒤에만 40여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그래픽 참조〉

이같이 수많은 '젊은 죽음'이 의혹에 묻히는 것은 군사상자 수사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는 지적이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부대장은 24시간 이내에 참모총장에게 사망원인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미리 수사결과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생긴다. 또한 타살로 밝혀지더라도 지휘선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정확한 진상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은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실제로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의 경우 '1999년 이전''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따져 선별 조사에 착수했다.

천주교인권위 남상덕(39)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군의문사를 제대로 밝혀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의혹 제기는 군수사보다는 보상책임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자살자들의 사후 처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현택기자 larchide@sgt.co.kr

여론마당

이 상 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국군의 명예-사기 북돋아 주라

—— 국군 창설 54주년을 맞으며

우리 국군이 창설 54주년을 맞았다. 소총과 수류탄으로 북한의 탱크에 대항해야 했던 6·25전쟁 당시의 모습을 회고할 때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오늘의 장년 국군을 바라보는 감회는 남다르다.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들은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차원을 넘어 군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적이 누구인가?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자가 적이다. 그런데 백만 대군과 대량살상무기를 우리를 향해 배치해놓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적인지, 아닌지 혜괴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난데없이 후방에서 들려오는 주적 논란은 두눈을 부릅뜨고 면전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6·25전쟁 때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를 위해 싸워준 미군 중 무려 4만여명이 이 땅에서 전사했다. 지금도 3만 7000여명의 미군들이 이 땅에 주둔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친구들을 이제는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군과의 연합전력이, 주한미군의 사기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조작으로 단정지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증거도 부명하지 않은데 서둘러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건재할 수 있는가. 필자는 며칠 전 추석을 맞아 재향군인회 임직원들과 함께 해·공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 손으로 생산한 KF16을 타고 조국의 영공을 경계하고 있는 젊은 공군조종사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았다.

또 "이제 교전규칙이 바뀌었으니 또다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1척도 남김없이 격침시킬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는 해군 지휘관의 한일자 입술을 보았다.

아,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군이 건재하구나,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천명의 연륜을 쌓은 장년 국군답게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나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더 이상 군이 범죄집단이나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의 비리에 눈감아서도 안되지만 조그마한 과실이 침소봉대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군의 작전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안일한 불의의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사관들의 명예심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인생의 황금기를 국토방위에 바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명예심에 흠집을 내서도 안 된다.

다시 잊혀지는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6일 조사활동을 중단한 지도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법개정을 통해 의문사규명위의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도 이에 화답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결정했고 한나라당도 서청원 대표의 발언을 통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법개정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 법사위는 국감을 이유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자 의문사는 다시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의문사규명위는 장준하, 이내창, 박창수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를 '조사불능'으로 결정한 채 마무리 됐다.

과거 사건의 실체규명 못지 않게 더 많은 의문을 과제로 남겼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이라고 발표됐지만 누가 무엇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400일이 넘는 국회 앞 농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지금은 답답한 현실만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문사규명위와 해방 이후 친일과 척결을 내세웠다가 좌초한 '반민특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의문사규명위의 쓸쓸한 퇴장이 반민특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반민특위는 우리의 우울한 역사임에 틀림없다.

취재수첩

현재의 역사가들은 당시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의문사규명위가 이대로 좌초한다면 반세기가 지난 후 역사가들은 2002년의 한국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류 정 민

이는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5일 이전에 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이다. 우리 스스로 법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의문사위는 조용하고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노동사회부 기자
dongack@labrow.com

'인혁당' 관련 강제추방 美 조지 오글목사 방한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고문조작설을 처음 제기했다가 유신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됐던 조지 오글(사진·73·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29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오글 목사는 공항에서 기자를 만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이를 공식 확인한 사실이 인상적"이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문조작 사실을 주장하다 역시 추방당한 제임스 시노트 신부가 다음달 14일 방한하면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주 남짓 체류하는 동안 인혁당 사건의 유족·피해자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다음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 민주화인사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오글 목사는 30일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주는 제5회 한국인권상을 이덕우 변호사와 공동 수상한다.

◉박지연기자 anne02@kdaily.com

한 국 시 론

정혜구 성공회대 시회과학부 교수

의문사 규명 중단 안된다

16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서가 아니다. 미진한 조사활동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법정 조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의문사위원회와 관련 유족들은 당연히 활동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묵살했는데, 그 이유에서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거니와 묵살하는 수단과 방법이 졸렬하기 그지없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됐으나 심사도 받지 못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책임 있는 언급은 커녕 그 흔한 논평도 한 마디 없다. 청와대 역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묵묵부답이다.

무관심속 의문사委 고군분투

정치권의 태도는 무관심을 넘어 무책임하기조차 하다. 아마도 '이 정도의 조사로 면피는 했으니 더 이상 문제를 건드려 확대시키지 말자'는 그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듯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마지못해 응했던 것이었다. 의문사특별법 제정이 무나 군, 경찰 등 막강한 정부 권력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책임을 부여한 위원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란 고작 그 정도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그만큼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약한 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조사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기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그 존재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발로 뛰었던' 조사원들과 이에 대한 유족들의 눈물겨운 성원 때문이다. 위원회가 조사한 참고인 수가 5,613명에 달했고, 이를 위해 조사관들이 출장을 다녔던 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897회나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조사대상인 정부기관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어떠했던가. 그들은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없다고 잡아떼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불필요하고 무관한 자료를 주거나 흘려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박창수(한진노조위원장)씨 사건의 경우 1년 전에 요청한 자료가 조사가 종결되는 날에야 위원회에 도착했다. 조사 종료 마감일 현재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총 조사대상 83건 중 취하 1건, 기각 33건, 인정 19건, 조사불능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각이나 조사불능으로 결론 난 사건의 상당 부분이 조사활동 기간의 부족에 기인한 것인 만큼, 이 사건들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민화합위해 법개정 필요

이와 관련, 관련 유족 및 단체들은 조사권한의 강화와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의문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진실을 밝히는 가해자에 대한 사면권 보장, 조사기간의 제한 철폐 등을 보장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렇게 중간에서 멈추어도 되는 것인가? 의문사특별법은 법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법정기간 마감이라는 법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렇듯 중도에서 마감된다면, 그리고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이 정치인의 무관심과 국회의 묵살로 무산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일까?

`의문사위' 재구성 접근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김범현기자 = 지난 16일로 활동이 종료된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만간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3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의문사위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각당이 노력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정 총무가 전했다.

정 총무는 '의문사위 구성과 관련한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의문사위를 조속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양당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그러나 `4억달러 대북지원설'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공적자금 특위 및 정보위 재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박지원 청와대비서실장,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공적자금 특위 증인에서 제외하되 특위 활동시한을 2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양당은 증인채택 범위를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켜 지난 27일부터 증인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특위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4억달러 대북지원설과 관련, 이 총무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특별검사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 총무는 '현단계에서의 국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회가 국조를 통해 기업활동에 관여할 경우 대우에 이어 현대마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 정 총무는 '대선 완전공영제 등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두 총무 모두 특위 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고집,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정보위 선임문제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정보위 재개 문제를 놓고 정 총무는 `홍 의원 배제'를 요구했으나 이 총무가 반대해 정보위의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 총무는 회담에서 10월 1일부터 열리는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gija007@yna.co.kr kbeomh@yna.co.kr (끝)

발 행 일 : 2002년 10월 12일
발 행 인 : 한상범　편집인 : 황인성
발 행 처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2F
연 락 처 : 3703-5975~7(TEL), 3703-5978(FAX)
홈페이지 : www.truthfinder.go.kr
인　　쇄 : 덕산인쇄(2279-6548)